

전북도, 달걀 껍질에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

오늘부터... 닭의 사육환경 1~4로 구분 표시

전북도는 23일부터 달걀 생산 농가(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출하하는 달걀의 껍질에 달걀을 낳는 닭의 사육 환경을 1~4로 구분 표시하여 출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반조치 명령장 폐쇄, 미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달걀을 살 때 표시된 농장별 고유번호(축산업 등록 또는 축산업허가 번호) 검색(식약처 홈페이지)으로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한 주소 및 생산자를, 사육환경 표시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인지, 기존 좁은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달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연차적



개선전 (농장명, 시도별번호) → 개선후 (고유번호, 사육환경)

농가가 달걀 출하시 농가 고유번호, 사육환경, 산란일자(의무적으로 표시)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세계 최초로 의무 표시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靑, 태풍 '솔릭' 대비 국가위기관리체계 본격 가동

정의용 실장, 청와대 상황실서 정부대처 상황 점검 靑위기관리센터, 3차례 영상회의... 태풍 대비 만전

청와대는 현재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지난 21일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의 진행상황 및 정부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재해 취약분야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태풍 경로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중인 금강산 지역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초 이날 예정했던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태풍 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장 연기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안전실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 상황 판단과 대책 점검을 한 차례 진행했다.

21일 오후부터는 회의 참여 대상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으로 격상한 뒤 2차 영상회의를 가졌다.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결정했고, 대응 1단계를 가동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2일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윤의철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태풍 '솔릭' 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특검 "수사연장 않는다" ... 25일 종료 → 27일 결과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상용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논의 거치며 막판까지 고심 거듭
연장 요청하지 않아 25일로 수사 종료
"더 이상 조사·수사 적절한 정도 아냐"

그러면서 "수사기간이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및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월 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대통령은 수사 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특검에 통지한다.

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은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오는 9월24일 수사 기간이 최종 종료된다. 대통령이 특검팀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팀이 연장 요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에 끝난다.

특검팀은 막판까지 내부 논의를 거치며 고심을 거듭한 뒤 결국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특검 수사는 25일 마무리된다.

원불교 최고지도자 선거 내달 18일 치러져

정수위단원 후보자 남 27명·여 27명씩 등록

원불교 최고 지도자 경산 장승철 종법사가 오는 10월말로 임기가 끝남에 따라 내달 18일에 치러질 종법사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함께 원불교 최상위 결의기관인 수위단회 구성을 위한 정수위단원 선거 역시 내달 13일로 잡혀 있어 원불교 교계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불교의 최고 의결기구인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단장으로 하며, 선거로 선출한 남녀 각 9명의 정수위단과 선출된 정수위단원이 선출한 출가교도 8명의 봉도수위단, 재가교도 8명의 호법수위단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정수위단은 남녀 각 1명의 중앙과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봉도수위단과 호법수위단은 남녀 각 4명씩을 둔다. 모든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이번 정수위단원 후보자로 남자 27명, 여자 27명씩이 등록했다.

종법사는 정수위단회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고, 수위단회 전체 재적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장승철 종법사는 지난 2008년부터 연임하며 원불교를 이끌어 왔다. 한편, 1916년 교조인 소태산 박종빈(朴重彬·1891-1943) 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어 개교한 원불교는 이후 정산(鼎山) 송규(宋奎·1900-1962), 대산(大山) 김대거(金大聚·1914-1998), 좌산(左山) 이광정(李光淨·76) 종사가 종법사를 역임했다.

원불교는 국내 14개 교구 500여 개 교당과 세계 23여개국에 67개 교당과 20개 기관을 두고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내년 일부부처 특활비 없애려 한다"

이낙연 총리 "많이 삭감했고, 덜 쓰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차예배 비론 마련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려고 한다"며 "올해부터 제도 개선 집행계획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매년 감사원 결산 점검 부처 내부통

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해서 통제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며 "주로 겨러금으로 쓴다거나 하는 게 많다"고 말했다.

채 의원이 "겨러금 사용 목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그런 목적이지만 금액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의 특활비 내역 제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책실명제 사업 국민이 신청... 추진사항 등 공개

정책실명제 관련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과 집행 관련자의 실명·의견을 기록·관

리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도입했다.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